

# “국회 양원제 도입... 지방법원장 주민이 직접 선출하자”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 출범... 지방분권형 개헌안 내용 보니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이하 국민주권회의)가 국회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기본관계를 명확히 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추진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놨다.

개혁적 성향의 광주·전남 시민사회 활동가·학자·법조인 등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주권회의는 2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국민주권 실현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출범식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윤장현 광주시장·이낙연 전남지사·정구선(사)NGO시민재단 이사장·이상수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 간사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 직후 열린 토론회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열렸으며 유선호 변호사와 이창용 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은 각각 개헌안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류한호 광주대교수,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창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정책위원장, 윤영덕 광주로(略) 연구소장이 나섰다.

이들이 제시한 개헌안에 따르면 과거 제2공화국에서 9개월 간 존속했던 국회 양원제를 되살리는 방안이 수목했다.

이들이 주장한 양원제는 국회를 하원인 민의원(民議院·국민대표)과 상원인 참의원(參議院·지역대표)으로 나눈 뒤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의원은 총 250명 이하로 임기 4년에 비례대표가 50% 이상 포함되며 예산법을 안 심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상원인 참의원은 민의원과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총 50명 이내로 지역을 대표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시민단체·학자·법조인 등 100명으로 구성... 토론회

중앙·지방정부 재정 배분 수지균형 이루도록 운용해야

수 있다.

참의원은 지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의안과 국방·외교·남북관계에 관한 의안은 먼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참의원은 재직 중 당적을 갖지 못하며 내각 각료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원합동회의에서 결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의원의 의견이 우선 적용된다.

국민주권회의는 대한민국은 중앙과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지방분권국가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본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시·군·구는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시·도는 시·군·구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중앙정부는 시·도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각각 처리하며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원칙에 따라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안도 포함시켰다.

중앙법원의 법관과 중앙법원장은 양원(상·하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하되, 지방법원의 장은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안도 신설했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는 2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출범식과 토론회를 열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정세균 “5·18 진상 낱낱이 밝혀져야...국회가 앞장설 것”

국민주권회의 출범식 참석 “개헌 20대 국회서 이뤄질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 전 개헌은 어렵지만, 늦어도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틀림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 기록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 광주·전

남 주권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국회의원 3분의 2에 달하는 20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78%의 찬성률로 대통령을 파면한 국회가 이번 국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대통령이 개헌을 저지할 것이라는 걱정 탓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현재 개헌특위가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으므로 새 대통령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의원 3분의 2가 개헌에 동조하지만, 속내는 다르다”며 “다만 권력 집중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권해야 하겠다고 하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개정 헌법에 담긴 분권은 입법·사법·행정 권한을 배분하는 ‘수평적 분권’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직적 분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광주를 찾아 국립 5·18묘지를 참배하고 “최근 전일빌딩 헬기 사격 증거 발견 소식을 접하고 5·18 역사는 낱낱이 모두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5·18 역사 규명 문제는 국회가 앞장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여러 정당이 협의하고 주장하며 운영되는 국회의 특성상 논의를 거쳐 순리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 특검 “우병우 직무유기 수사...개인비리는 상황따라 판단”

청와대 압수수색 벌리 검토 마치고 방범·시기 조율중

박영수 특별검사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등 특검법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래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 범위에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포함되는지 묻는 말에 “특검법 제2조 9호, 10호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비리 등 기타 혐의까지 (수사

가) 나아갈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수사의 ‘분류’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밝히면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추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증거물 수집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특검은 현재 법리 검토를 마치고 방범·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에 최순실 씨 등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제2조 9호)를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특검법에는 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해임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됐다는 의혹(제2조 10호)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제보와 수사 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경장’ 자금 유용 의혹, 이들의 의견 보직 특혜 의혹 등 내용

이 담긴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기록도 특검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임명됐고 이듬해 2월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올랐다.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 관계는 물론 최씨의 국정·이권 개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특검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25일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최씨의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이후 집행을 검토했으나 25일 열릴 예정이던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날 집행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가족협의회 ‘7시간 직무유기’ 박대통령 특검 고발

세월호 참사 유가족으로 꾸려진 4·16 가족협의회 등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위기 상황 관리자로 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을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일에 특별한 사정 없이 사적 공간 성격을 갖는 관저에 머무는 것은 직장이탈 행위”라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유기행위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보니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속히 보고를 할 수 없었고, 대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골든타임 40분을 허비하는 원인을 박 대통령이 제공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또 “서면 혹은 우선보고를 받고도 위기관 리상황실로 가거나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해 1월 초 북한 핵실험 소식을 듣고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전례와 비교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